

# 목 차

---

## ■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Executive Summary ..... 1

1. 대학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2

2. 정부의 교육 철학 및 정책 방향 ..... 3

3.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 ..... 9

< 토론 > ..... 12

■ HRI 경제 지표 ..... 28

##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 □ 문제제기: 대학 교육의 현주소

- 낮은 대학 교육경쟁력 :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의 사회경제적 적합성은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50위를 기록
- 한국 교육의 본말전도 : 대학 입학에 위한 노력이 대학 졸업을 위한 노력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 낮은 대학 교육 경쟁력의 근본 원인
- 입시 교육이 초중등 교육을 지배 : 대학 선발고사에 맞춘 초중등 교육이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파행적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

### □ 정부의 교육 철학 및 정책 방향

- 대학 졸업에 엄격한 기준 마련 : 학생들이 대학의 입학에 들이는 공보다는 대학 졸업에 들이는 공이 크도록 제도 개선
- 초중등 교육 정상화 : 대학교의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지만 대학 학생 선발의 자율권이 초중등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6자 회담이 타결됨으로써 북핵 폐기에 이르는 과정의 굳건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 □ 대학 교육 역량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

- 교육 역량 강화 : 연구 역량뿐만 아니라 교육 역량까지 대학 평가 기준으로 삼을 방침임  
·그 동안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지만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여 향후에는 교육 역량의 강화를 위한 정책 위주로 나아갈 계획임
- 미흡한 대학 재정 지원 확대 :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법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및 장학금 마련을 위한 자원 확보에 주력할 것임

#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 출처 : 한경미래니엄포럼
- 일시 : 2007년 4월 25일
- 연사 : 김신일 교육 부총리
-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 주제 발표

### 1. 문제 제기: 대학 교육의 현주소

(김신일 부총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전통 있는 포럼에 연사로 초청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글로벌 HR포럼을 시작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는 그 포럼에 참석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글로벌 포럼을 국제수준으로 높이자! 다보스포럼 수준으로 가자! 아주 야무진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잘 됐고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다음 회 때도 반듯이 오겠다고 약속하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 혹은 필요하다면 내년 정도까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포럼을 정부가 직접 주최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한국경제신문’과 ‘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이유로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부가 앞장서야 되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다르고, 양자간에 협력해야 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 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밀어

주고 나서 민간에서 주최하도록 유도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불(三不)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으려 합니다. 사실 삼불 반대론을 자꾸 꺼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진짜 중요한 과제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삼불 -대입 삼원칙- 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를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삼불보다 훨씬 시급한 우리의 교육 과제인 대학의 국제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쟁력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결국 하나하나의 대학들이 얼마나 졸업생을 잘 길러내느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들은 어떤 국제 기준에 비추어 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체감이나 대학 교수들, 총장님들의 체감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외국대학 나온 사람에 마음이 먼저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국내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 굳이 외국대학 졸업생을 먼저 생각하시지요. 이런 것들이 체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2. 정부의 교육 철학 및 정책 방향

오늘날 우리 대학에서 만사는 인적자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 씩 남들에게 인적자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막 태어난 단계부터 인적자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아기에 형성이 되는 인적자원의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는 이 점을 경시하였습니다. 요즘 사회적 관심은 오로지 보육 혹은 탁아 개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봐줄 사람이

없고 친정엄마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딱히 외국처럼 정리된 베이비시터 시스템도 없어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봐주는 걸로 가자는 것이 현 단계 우리의 관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관심입니다.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적자원 형성기간으로 유아기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거의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의 형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인적자원의 형성은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세계에 들어가서 직업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적자원은 계속 형성 되어가고, 재교육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인적자원이 계속 보강·양성 되어갑니다. 기본적인 것은 학교시스템을 통해서 인적자원 형성이 마무리되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아기에서 인적 자원 형성 정책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만 기회가 있다면 지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의 기본 시스템에서 볼 때 초등학교는 국제기준에 비추어 봐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큼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좋습니다. 말하자면 초등학교로부터 길러져 나오는 우리 어린이들의 여러 가지 수준, 꼭 교과 지식수준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력, 사회성, 정서적 안정도 등 여러 가지 기준에서 볼 때 세계의 어느 수준에 비해도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제기준으로 볼 때 매우 좋습니다. 교과 지식에 관한 것은 많이 얘기를 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지만 OECD국가들이 중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피사(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학업성취도 국제비교)를 보면 읽기능력, 사고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등에 있어서 40개국 중 1등 아니면 2등, 최저가 4등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믿어지지 않아서 커닝한 것 아니야!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 성적이 그렇게 좋지? 다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정상 분포 곡선으

로 본다면 우리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가 있습니다. 평균도 높고 아주 우수한 아이들도 더 많고 열등한 아이들이 적습니다. 나아가 OECD 40개국 가운데 그것도 한 해에 한 것이 아니고 2000년, 2003년, 2006년 3년 마다 비교한 분석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학년에서 더 좋고 초등학교보다 중등학교 가면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국제 기준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로 자주 인용하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자료를 인용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학졸업생의 사회경제적 적합성, 즉 얼마나 대학졸업생을 직업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인가? 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60개국 중 우리나라는 50등입니다. 국제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경총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4년제 졸업생을 대기업에서 채용하여 일을 시킬 경우에 약 2년 가까이 재교육을 시켜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입니다. 그것을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재가공을 해야 하니까 2년이나 걸리고 비용으로는 약 1억이 든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총회장님한테 그거 과장 된 거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조사 결과라고 정색을 하시더군요. 대부분의 다른 조사에서도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투입해서 일하게 하려면 1년 이상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반으로 한다고 해도 적어도 몇 천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중등학교까지는 좋은데 대학에 가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 유학 가는 것이 문제인가? 왜 유학을 갑니까?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 있겠죠. 유학을 보내는 부모의 입장, 또 유학을 가는 학생의 생각은 같은 졸업장이라도 국내졸업장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인정보다 외국 대학 졸업장의 사회적 인정도가 높으니까 결국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나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같은 교수 뽑으려면 누굴 더 뽑습니까. 대학이 왜 그러니까? 자기네가 길러낸 사람을 왜 안 믿습니까. 그건 그 대학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 최대의 문제는 ‘대학졸업생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인 것입니다. 흔히 대학 측에서는 그 원인을 중등학교에서 제대로 못 길러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평준화 때문에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글썄요. 대학교수님들은 그렇게 느끼실지 몰라도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은 우리 고등학교 출신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그렇게 우수한 아이들을 길러 낸다는 말입니까. 뭔가 있는 거죠. 김신일이 교수 때는 안 그러더니 장관 되더니 소신 바꿨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어느 분이 저를 그렇게 알겠습니까. 김신일이 누군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것을 알보고 싫어합니다. 그러니 졸업생인들 존중을 하겠습니까. 교수들이 자기들끼리도 자기들이 쓴 글을 읽지 않고 그 주장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지 않으니 길러낸 학생들에 대해서도 자기 제자만 똑똑하다고 하지 전체로써 우리나라 국내에서 길러낸 학생들에 대해서 자꾸 폄하합니다. 요즘 얘기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대학은 어느 대학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라도 입학생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졸업생 잘 기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제 평생에 지론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똥판지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을 둘러보니까 외국의 사례도 저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학을 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 본 결과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입학생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나라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회 지도 인사들이기 때문에 외국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많은 경험도 하신 분들도 계신 데 세상에 어느 나라가 대학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대학 들

어가자마자 졸업하려면 어떻게 하지? 졸업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지? 중간에 탈락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반대로 세계 어떤 나라가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나는 졸업장은 받아 놓은 거네! 4년만 지나면 학사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들어갈 때는 오히려 우리보다 덜 고생하고 덜 고민하고 들어가지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대학 졸업하려면 이제부터 고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들도 코피 흘리며 공부하고 밤 세워서 논문 쓰고 숙제시키고 교수들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나라에 친구들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 학생들 지도하고 리포터 읽느라고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으로 보내 온 과제를 읽고, 학생들을 지도하느라고 한 친구는 제가 갔는데도 “신일 잠깐 있어, 이거 내가 오늘 저녁에 다 해줘야 해! 너 먼저 자라.” 외국에서 친구가 왔는데도 이 친구 밤 3시까지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도 죽을 지경이지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저는 대학 입학에 들이는 공보다 졸업에 들이는 공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소신입니다.

저의 두 번째 소신은 차후에 입시 제도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상급학교가 입시 방법으로 하급학교를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급학교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상급학교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뽑고 싶은 사람을 뽑기 위해 그것을 입시 기준으로 내세워서 뽑기 시작하면 대학을 안 가면 모르지만 대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급학생들은 그걸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하급학교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아이를 지도 해줘야 하나? 아니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따라야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대학교 본고사를 치자. 대학교 본고사 해 본 세대도 있고 안 해본 세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가 95년까지, 정확하게는 96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어떤 해는 본고사 세대이고 어떤 세대는 연합고사 세대고 어떤 세대는 국가고사 세대이고, 예비고사 세대이고 또 예비고사와 본고사 병행세대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대충 아시죠? 대학교 본고사가 무엇인지?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어와

수학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영수학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입학생을 뽑으면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날부터 고등학교는 고민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칠까? 다른 과목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있는데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치고 아이들 확실하게 대학입시 지도하기 위해서 다른 선생님들은 미안하지만 집에 계세요. 월급은 드릴 테니까, 라고 해야 되나.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과목을 하죠. 그러면 애들은 듣습니까? 자던지 차라리 체력을 보충했다가 학원에 가서 국어, 영어, 수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명문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국, 영, 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성골과 진골로 나뉘듯 나뉘어 졌던 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2차 대전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입시제도는 혹시 질문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미국도 50년대에 많은 논쟁 끝에 결국은 지금과 같은 제도, 즉 상급학교가 하급학교를 입시방법을 통해서 지배하지 말자, 그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배하지 말자는 방식에서 나온 것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것 가지고 뽑자, 그것이 학생부입니다. 고등학교가 뭘 가르쳤는지, 그 가르친 것을 학생은 어떻게 배웠는지, 교과목은 어떻게 배웠는지, 학교생활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기록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어떠했고, 국어는, 수학은, 물리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등학교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고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웠고 교과는 어땠고 교과가 아닌 것은 어땠고 학생회장은 했는지, 어디에서 봉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는데 대학이 고등학교를 지배하지 않고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부를 바탕으로 상급학교가 입학생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학별로 본고사를 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대학별 본고사 치지말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입학생을 선발하면 본고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고

사만 안하면 아무거나 좋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논쟁이 생깁니다. 왜 논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시콜콜 그러느냐, 그 얘기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고등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아닌 걸로 대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하면 고등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아닌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고등학교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지극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논쟁 끝에 50년부터 그렇게 해 오는 것이고 유럽은 그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70년 대에도 대학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2~3년 심각한 논쟁을 하다가 고등학교 교과에 기반하여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자율권은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을 훼손할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상급학교에 자율성은 있지만 각급의 학교교육은 지켜야 될 그 학교 단계별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 평생의 소신입니다.

### 3. 대학의 교육 역량의 강화 및 재정지원 확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대학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첫째는 ‘교육 역량’이 열악합니다.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연구 기관이기도 하고 교수님들은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연구 역량이 부족해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쓰고 교수의 평가도 연구 성과로 따지고 대학의 평가도 연구 성과로 따져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반면 교육성과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교수님들의 ‘교육 역량’을 키우는데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물론 연구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 지원에 대한 정책은 과거의 정책으로부터 탄력을 받아서 상당히 지속성을 띠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육역량을 높여야 할 대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의 평가도 교육의 평가로 하고 대학에 대한 평가도 물론 연구 성과도 따지지만 교육의 성과를 가지고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해 취임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교육 정상화 방안이고 금년부터는 그것이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대학 총장님들이 다 좋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총장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자율화, 학사 관리의 자율화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는 것을 밤 나와라 대추 나와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대학이나 교수님들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학에 있었지만 교수들이 뭘 하려면 대학 자체 내에서도 규제가 많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대학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교수님들은 이것이 다 정부 탓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대학에서의 관계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교수가 연구하는데 문제가 되는 규제, 대학 내에서의 관계에 관한 규제, 등을 풀어서 교육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총장님들도 독립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여 정부안과 민간안을 종합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만 국민 여론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은 아직 대학에 대한 불신이 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대학이 학생 선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은 학부모들이 대학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탓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받기 쉬운 것,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 등에 대해 대학이 스스로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걸 무릅쓰고 하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또 국민들은 대학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학에 대해서 신뢰를 하니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국민들이 믿도록 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재정 지원입니다. 돈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스템 중에 제일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지원을 어떻게든지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써는 지금 몇 가지 특단의 방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기업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거나 참여할 때 그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감면하느냐? 이런 것들이 큰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학이 직접예산을 고등교육에 예산을 직접 늘리는 것이 하나의 과제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그걸 특단의 정책을 세우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 대학은 가난하죠. 따로 들어오는 지원은 없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들어오는 것도 꽤 있고 정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꽤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학생들은 이제는 워낙 진학률이 높아서 최하위 소득계층도 지금 대학에 갑니다. 옛날에는 중상층 이상이 주로 갔으니까 등록금이 높아도 그렇게 가계에 큰 압박이 안 됐지만 지금은 최저 소득계층까지 대학에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엄청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겨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각종 장학금, 학자금 용자에 대해 완전히 무이자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데 그 위에 계층은 대책 없이 자기들이 학자금 용자에 대한 이자를 내야하는 부담으로 새로운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인데 전체의 대학의 재정을 늘려 가면 등록금 문제도 나중에 해결이 되겠지요. 하지만 가까운 10~20년 안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학생들의 대한 학자금 용자인데 학자금 용자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대신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것을 제가 기획예산처하고 싸우고 있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교육부장관 편을 들어주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부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대학, 기업, 사회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분들께서 대학재정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 토론

(서강대 최운열 부총장) 오늘 부총리께서는 40년 동안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참석하신 분들도 교육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정토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는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대학본부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제가 강제적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대학에 있는 관계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수준은 굉장히 높는데 대학으로 가니까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그런 게 실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셨습시다만 저는 결론적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우리나라 GDP대비 학교교육비 비중은 7.5%로써 OECD의 5.9%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또 작년도 전체중앙부처 예산대비 교육비 예산은 17.6%로써 국방비보다도 높습니다. 전체적인 교육비 투자는 이렇게 많은데 왜 대학은 투자가 안 된다고 하는 가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대학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를 보면 사립대학 1년 전체 예산 대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비율은 3.7% 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가가 약 20~30%에 이릅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은 많은데 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적은가? 그것은 당연히 초, 중, 고등학교에 모든 정부의 교육비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등학교 등급제 등에 관한 이야기 나올 텐데요. 고등학교에도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립학교는 모두 건학 이념이 있고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 국공립, 사립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고등학교에 평준화 정책을 위해 학생을 강제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살릴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나서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사립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예산을 거의 다 지원해주고 있죠? 중등교육 밑으로 전체예산을 대부분 투자를

하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고등학교도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설립 목표가 있고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리도록 놓아주고 국공립학교들은 계속 평준화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이제는 특징을 살려서 학생들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본인들이 알아서 조달하게 하면 등록금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 고등학교가 국공립하고 비슷하게 등록금이 낮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발생한다면 정부의 고등교육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삼불정책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좋으냐? 나쁘냐? 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별로 좋은 토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부금 입학제도가 그 좋은 예입니다. 전국 대학 중에서 이 제도를 찬성하는 대학이 열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처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넣어서 삼불 정책을 얘기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대학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못 가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등급제라든지, 대학 본고사 문제도 같이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 입학제와 고교 등급제 및 대학 본고사 문제를 분리해서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 고등학교 등록금의 자율권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정부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 국가에 대한 교육 기여도에 따라서 정부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오늘날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가 연구도 잘 안하고 강의도 부실하게 한 측면도 있겠지만 교수 강의의 질을 높이고 연구 역량을 높이는데도 재정 지원이 없이는 사실 어렵거든요. 결국은 투자 재원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근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에서 이제는 의무교육 정도는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계속 관심 갖고 정책을 펴야겠지만 대학교육은 대학에 맡길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정책적 관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관여를 하려면 선진국처럼 예산이라도 2~30%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입시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율에 맡겨 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신일 부총리) 예, 부총장님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되어야겠지요. 말씀하신 데로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정부 예산을 초, 중등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1년 예산 중에 매년 85~86%는 초, 중등교육으로 갑니다.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에 11~12%가 배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이 2~3%밖에 남지 않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정부에서 제일 많지만 실제 교육부 장관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없습니다. 지방이나 대학으로 가고나면 2~3%를 가지고 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장님께서 사립중고등학교에는 등록금 등에 대한 자율권을 주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정부의 선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사립이 얼마 안 되죠. 숫자가 사립은 얼마 안 되니까 사립은 따로 떼어 놓고 정책을 세워도 되고 또 한 가지 대부분의 외국-우리가 외국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유럽이나 미국-의 사립은 과거에 교회에서 세운 것들인데 여기에 세속적인 공교육 체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기반한 사교육 기관들이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에 기반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가르치고 우리가 알아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세속정부가 왜 개입하려고 하느냐”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자율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서양에서 처음부터 사립이나 공립이냐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공교육체제가 도입될 때 끝난 논쟁입니다. 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고등학교가 학생 수의 측면에서도 공립보다 사립 고등학교가 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처럼 사립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갈수가 없고, 간단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사립에 가 있는 학생들도 내가 사립에 가고 싶어서 갔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은 고등학교 10학년까지, 우리나라의 고1~2까지 완전한 무상의무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무상의무는 전혀 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교과서도 다 주고 우리는 지금 정부가 중고등학교 대준다고 해도 아직도 중학교에서 지금도 공부시간에 뭘 한다고 하면 준비물을 사가야 합니다. 중학교조차도 의무 무상이라고 하면서도 수업료를 안 받고 육성회비 안 받는다고 해도 학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지만 여전히 OECD 기준에 비춰보면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된 무상교육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초, 중등학교로 들어가는 돈을 얼마라도 돌려서 고등교육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다만 중등학교 교육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지난해 법이 통과 되어서 내국세에 20%를 지방교육제정에 배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교육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짜느냐고 아직도 난리지만 그래도 초, 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대한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OECD 평균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돈이 GDP의 1.1%입니다. 우리는 그 절반인 0.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GDP에서 투입되는 규모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재정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데로 대학재정에 대한 특단의 조치 그렇게 하기까지는 초, 중등교육을 여기까지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교육정책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대학 쪽으로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총장님 말씀대로 자유를 주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든지, 도와주든지 하지 제대로 지원도 안 해주고 규제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칼의 양날입니다. 정부수립 이후 대학은 정원제가 없었습니다. 50년대 내내 대학에는 정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완전 자율이었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도 못 해주니까 정부가 규제하면 안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학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받아 들였는지 50년대 말에 국민들의 비난이 커지면서 이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60대, 70년대 초까지 정원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이 정원제를 무시하고 학생들을 선발하였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신문에 크게 나고 총장님들이 국회에 가서 망신을 당했는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아직 이 문제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대학 자율이 필요합니다. 학생선발의 자율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보결 입학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떤 대학은 그 대학 교수님들 자녀들을 주로 입학시켰습니다. 기여 입학제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론도 좋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여 입학제를 받아들인다면 받아 들일만 하지만 현재의 대학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는 수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율과 책무성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정부의 지원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가서 대학 재정 지원문제를 꺼내면 국회의원들 하는 얘기가 대학재정에 투명성을 정부는 확보했느냐? 정부는 책임질 수 있느냐? 라고 나옵니다.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국민들의 세금을 대학에 주라고 하면서 장관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물론 재정지원을 하는데 대학도 같이 협력을 해서 투명성과 책무성을 병행한다면 길은 열린다고 봅니다. 머지않아 정부의 재정지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학이 함께 노력하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상기 교수)** 삼불 정책과 비슷하게 신문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국립대학의 법인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데 국립대학을 법인화 한다고 할 때 그 법인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인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그 법인화를 정의하는데 몇 년을 보낼 정도로 행정법인이냐, 특수법인이냐, 때문에 법인화에 대한 정의 때문에 몇 년을 보냈는데 법인화를 잘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힘들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화를 얘기를 하면서 정부와 학교가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

대로 법인화하면 자율화 되는 줄 알고 있고 정부에서는 예산 절감되고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계기로 삼으며 경영 개혁을 하려고 한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슈화 되는 것 몇 가지를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립대학이 46개로 알고 있는데 법인화하면서 한 가지 기준을 할 것인지, 국립대학 46개 중에서도 자율화 할 수 있는 능력과 규모다 다 다를 텐데 자칫하면 한 가지 기준으로 해서 법인화를 추진한다면 여기도 저기도 안 맞는 불편한 법인화가 될 수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전광우 회장)**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교육현황 문제점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가운데 코멘트나 질문 드리기에 제가 아는 상식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가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경쟁력강화라는 얘기를 할 때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혁신이나 발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시장원리를 적용할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흔히들 M&A를 포함한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이나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 구조조정이나 M&A를 가속화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경쟁력 강화나 혁신하고는 오히려 반대의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령화시대, 저 출산 시대에서 흔히 국제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활동 연한을 길게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문 인력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학교 교수님들일 텐데 이런 분들의 정년을 오히려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늘리는 것을 하나의 인센티브로 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유인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신일 부총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을 교수로 했으니 교수 물이 빠질 수가 없죠. 얘기를 하다보면 교수처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때때로 점잖으신 분들 앞에서 강의처럼 말씀드리곤 합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법인화는 좀 그렇습니다. 국립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직원들 중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분이 불안해지지 않을까 재정 조달에 문제가 생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만 크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계에서 이 문제를 자주 보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국립대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국립대학은 정부의 한 조직입니다. 교수들은 공무원입니다. 대학의 각 부서도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공무원의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정부조직법과 그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만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의 승급, 승진 제도도 정부의 인사조직체계속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있고 만약 어느 대학이 단과 대학을 만들고 싶다면 관련법부터 손을 대야 합니다. 정부 조직아래에 있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살린다면 무엇보다 유연해야 합니다. 인사가 유연해야하고 조직의 관리가 유연해야하고 회계의 관리가 유연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조직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화한다고 하지만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지원은 계속하되 완전히 마음대로 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회계원칙에 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보다는 훨씬 더 회계의 자율성과 인사관리의 자율성이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과 경북대학과 같은 국립대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국장님들은 물론 정부 관료입니다. 교육부에 있던 분이 그쪽에 1~2년 있다가 교육부로 오시고 또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는데 솔직히 그 분이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총장님들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죠. 실제로 살림해야하는 국장님들은 몇 년을 주기로 교육부와 학교를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과장하면 서울대는 주인이 없는 대학입니다. 주인이 없는 대학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 교수들이 대학을 완전히 관리하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갖는 한계도 있습니다. 법인화는 정부조직으로부터 대학이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유연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정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방식대로 계속 하고 신분 불안을 느껴서 여전히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못지않은 신분을 확보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연금도 공무원 연금이 더 안전하다고 해서 퇴직 뒤에도 법으로 차이가 안 나도록 하고 연금공단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 재정으로 보존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 설계를 융통성이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해 놓아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대학들 싸움 시키려고 하느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대학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회장이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구조조정은 통합을 의미하는데 저희들은 통합을 할 때 대학의 특성화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특징은 백화점식이라는 것입니다. 일류대학이나 밑에 등급이 낮은 대학이나 종합백화점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 대학에 뭐가 있지? 우리도 이거 하나 만들자. 그런 것 없으면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건지 종합성에 장점도 있지만 종합 백화점이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큰 몸집을 가지고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학생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여러해 전부터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 서부터 정한 방침입니다. 특성화가 살 길입니다. 어느 대학이고 중심 영역을 정해야 합니다. A대학은 이것에 집중하고 B대학은 저것에 집중하고 C대학은 그것에 집중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특성화가 정부의 정책이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평가나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혼자 서기는 어려운 대학들을 통합하여 24개를 12개로 줄였습니다만 아직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법인

내에 있던 것들이 합쳐지고 있고 본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을 당해야 되는 대학들은 어렵습니다. 기업 M&A도 어렵지 않습니까? 주 기업과 종으로 통합당하는 기업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학도 똑 같습니다. 우리가 통합되어 들어가는데 우리학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총장은커녕 학장 한번 못해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별로 이름 내세울게 없으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웃으실지 몰라도 학장 한 번하는 게 교수님들에게 상당한 매력이 있는 겁니다. 모든 교수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동안에 이런 작업을 해보면 이런 걸 계산 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학 학장은 몇 번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팀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전회장이 말씀하신 전문 인력의 확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 그렇지만 대학은 정말로 65세 정년으로 그냥 가기에는 아까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립대학들의 경우 융통성 있게 정년 대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70세까지 정년 하는데 아무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립대학들도 정년으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 관리하고 싶으니까 국립대학과 같은 정년 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이 건 법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사립대학이 얼마든지 정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이름으로 사립대학에서 0000교수 이런 식으로 다른데서 정년하신 분들을 채용하고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야 말로 얼마든지 사립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국립대학도 여러 이름으로 해서 이미 정년하신 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원장) 고맙습니다. 저도 전경련산하 인줄 알았는데 전경련 유관 기관이더라고요. 산하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자율성이 있더라고요.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 이해가 가고요. 저도 지난주까지 교수였거든요.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아까 최윤열 부총장님 말

썸대로 삼불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바람에 성역이 되고 패키지가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토론의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수단의 적정성에 대한 토론이 유연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 중, 고교 교육 정말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도 만족도가 높은 학부모 중에 하나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이들이 너무 공부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인성 교육이 생각보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에 대한 배려, 겸손, 예절,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강조가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교육정책 차원에 학업부담은 줄여주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질서도 지키는 민주 시민을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저도 교수 생활을 미국에서 4년 정도 했는데 꽤 좋은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던 강의 노트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교육의 수준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의 좋은 대학 못지않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제물과 문제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수 차원에서는 국제 차원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대학교가 그러느냐? 제가 보기에 미국의 명문대학과 한국의 명문대학과의 차이는 대학 간의 경쟁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자율화를 해주신다고 했지만 대학총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정말 교육부의 규제가 많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자율화를 아무리해도 경쟁이 없으면 도덕적 회의만 부추일뿐이라고 봅니다. 경쟁의 핵심은 잘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해봤자 생기는 게 없고 못해도 뺏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어봤자 사회성의 유효 경쟁이 없는 상태는 다양성도 없고 오히려 교수들만 편해지고 지원만 받는 모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나오는 원리나 글로벌 명문대학이 나오는 원리는 같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에 정부가 막무가내로 지원했으면 오늘 날의 삼성전자가 될 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학 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 세금을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김주현 원장) 부총리 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공급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10년 터울로 아이들을 셋을 키웠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커서 대학가고 했습니다만 저는 한국 교육 변화과정을 아주 뼈저리게 10년 동안 느꼈습니다. 부총리 말씀은 초, 중, 고까지는 잘 되는데 대학교가 경쟁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두 개가 같은 잣대를 놓고 본다면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3월 중에 전국 표본으로 학부모대상으로 천명을 사교육에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89.5%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등학교 학부모의 79.7%, 고등학교의 경우 54%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초, 중, 고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에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도 사교육 예산을 추정해보니까 거의 공교육의 예산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약 30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막대한 사교육비가 초등학생을 가진 학부모가 한 사람당 평균 30만 원 이상을 지급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 1,200명을 표본으로 중학교는 43만 원, 고등학교는 60만 원까지 평균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여나갈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두 번째는 경쟁문제 때문에 질을 높여야 된다. 초, 중, 고 교육에 교사 간에 학교 간에 특히 교사간이라고 본다면 평가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초, 중, 고교 교육현장에 가보면 학생들이 집에 와서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물론 잘 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현장에서의 평가와 그로 인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신일 부총리) 우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구성원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자기 개선도 하고 역량도 늘리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교육계가 약했습니다. 대학은 그래도 10여 년 전부터 교수들의 평가를 시작해서 지금은 꽤 가

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초, 중등학교는 노동조합도 있고 이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저항하여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현실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해 가을 교원 평가 법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처벌도 당했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까지 상정하였지만 교원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을 낙선 시킨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의원들 설득도 하고 학부모 시민 단체를 통해서 이쪽에서도 국회의원들 압력을 주자 반대 주장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대결돌이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계시니까 어떤 기회이든 어떤 식으로라도 아시는 국회의원이 계시면 특히 교육 상임위원회에 국회의원이 계시면 전화라도 해주십시오. “교사들이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하고 평가 내용도 낮췄다고 하는데 그런 평가도 안 받겠다고 하면 되느냐. 그런 거 교사들한테 휘둘리면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전화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안하면 정말 우리 교육계가 어렵습니다. 교원평가를 강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종석 원장님이 인성교육 문제 말씀하셨는데 뒤에 김주현 원장님 말씀 하신 것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간의 경쟁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이 학생들의 대한 경쟁은 계속 시켰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도 전국에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기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5.31 교육개혁안 때 제가 죽으라고 목청 높인 게 바로 대학간 경쟁입니다. 왜 전국의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면서 대학은 한 줄로 세우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학의 경쟁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평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 협의회가 대학 종합 평가를 할 때 한사코 결과공개를 꺼려하십니다. 솔직히 교원들 평가도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엄격한 평가가 아니고 낮은 수준의 평가인데도 교원들이 싫다고 하지만 대학협의회의 평가도 외국의 평가에 비하면 좀 낮은 수준의 평가인데 수준이 낮다기 보다는 연한 소프트한 평가인데 비교적 그것도 한사코 공개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내놓은 것이 대학 평가원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니 지금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초, 중, 고 선생님만 흥

볼게 아닙니다. 사실 대학의 총장님들 평가 받기 싫어하시고 평가한 거 공개하기 꺼려하시지만 정부정책은 어떻게 하든 평가하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공개가 되고 국민들이 알고, 이걸 여기가 더 잘하는 구나를 알아야 국민들이 국민의 세금을 대학에 넣을 때 찬성을 하시고 기업의 사장들이 도와주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솔직히 대학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크게 안 날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평가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고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만들도록 정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인성교육 문제인데 김주현 원장님 말씀처럼 사교육비 지출을 보면 요즘 초등학교에서 더 많이 들어요. 다음이 중학교, 다음이 고등학교입니다. 이게 저희들로서는 큰 고민입니다. 상급학교가 하급학교가 가르치는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 학생들을 뽑기 시작하면 불가피하게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나갑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학생부의 명목상 반영 비율이 40%입니다. 정부는 50% 이상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실제 반영률은 10% 안팎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책으로 50%다 대학이 우리는 40%를 반영한다 해도 학생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실제 반영률이 얼마인지, 명목상의 반영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 대학교 갈려면 학생부가지고 얼마정도 내가 그 대학 가는데 영향을 받는지를 따지는 것 그것이 학생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학생부 기준 선발 정책을 시행한 지 10년이 되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들이 학생부를 보고 선발하는 것에 아직은 비협조적이고 꺼려합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갑니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는 어떻게 하든 인성교육을 하려고 하죠. 심지어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학생을 때리면 학교에는 뭐라고 하면서 학원에서 때리면 ‘때려주세요, 우리 아이 점수 올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학교는 속수무책입니다. 학교가 인성교육 시킨다고 산천구경이라도 시키면 학부모들이 당장 뛰어오죠. ‘우리 아이 대학 떨어뜨리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빨리 풀어주세요 학원이나 보내게’ 이것이 현실입니다. 원칙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이 각각이 제 교육을 하게 하자 대

학이 불편하더라도 그걸로 선발하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대학 1학년부  
터 가르치자, 불편하겠지만 고등학교부터 학생 선발해 놓았더니 중학교  
에서 덜 가르친 것이 있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더 가르치면 되고 그렇  
다고 해서 중학교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을 망가뜨리지 말자, 그래야 고  
등학교나 중학교나 각 급 학교가 인성교육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교육비가 많은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어 고등학교입니  
다. 외국어 고등학교들이 실제 선발하는 학생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외국  
어 고등학교를 지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욕심이 있잖아요.  
외국어 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는데 유리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적  
어도 1학년 때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꿈은 한 번은 껴봅니다. 그러면 외  
고 가는 영어학원이라도 또는 토플학원이라도 보내게 되고 그래서 토플  
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것으로 학  
생을 뽑아서 안 됩니다. 그게 토플이건 다른 것이건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 가려면 멀었는데 ‘초등학교는 왜 그러느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  
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게 바로 영어 교육 때문입니다. 지금은 영어교  
육을 누구나 강조하고 외국에도 가고 외국에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도 합  
니다. 영어 가르치겠다고 동남아까지 가서 줄을 서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가 영어실력이 굉장히 뒤떨어지는데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영어실력이 절대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법, 단어, 독해  
력 등에서 우리가 확실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게 생활영어 아  
닙니까. 그동안 생활영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고등학교에서도 안 가  
르쳤습니다. 왜 안 가르쳤습니까, 대학에서는 생활영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나 회  
화해서 대학 들어갑니까? 대학은 언제나 문법, 독해력, 단어를 가지고 뽑  
았으니까 중, 고등학교가 생활영어를 가르치면 손해죠. 다시 말씀 드립니다.  
상급 학교가 상급 학교가 원하는 특정 지식과 특정 능력으로 뽑기  
시작하면 하급학교는 거기에 종속 됩니다. 하급학교가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사교육 시장으로 갑니다. 과거의 대학이 원하는 영어가 초,  
중, 고교 교과에 영향을 미쳤고 누구도 생활영어를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초, 중등학교에서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거죠. 아마 몇 해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부가 맹렬하게 하는 것이 교육대학에서 교사가 될 사람들에게 생활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육대학에서도 문법을 위주로 가르쳤습니다. 수필이나 읽고 했는데 지금은 교육대학에서 생활영어를 가르치는 걸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사 임용고사 때 생활영어를 측정을 합니다. 사범대학에서도 영어 교육과 학생들은 그들이 영어를 가르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대학 교수님들은 이 부분을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인데 생활영어를 가르치라고 하느냐? 하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중, 고등학교에 가면 문법도 가르치지만 생활영어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임용고사에 생활 영어 부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성교육이건 사교육비건 결국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상급학교 입학시험이 초, 중등 교육을 지배하게 되면 인성교육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 합니다. 영어를 가르쳐도 대학이 원하는 영어 밖에 못 가르칩니다. 조금 분석적으로 보면 수학교수님들은 아쉽습니다. 수학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지만 서양이 배우는 수학과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다릅니다. 대학교수님들이 대학입학 시험을 통해서 원하는 수학과 생활 수학이 다릅니다. 그것이 미국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수학을 배웠어도 다른 점입니다. 국어까지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주장을 간단하게 글로 쓰라고 하면 못쓰고 어디 앞에 가서 5분씩 스피치 하라고 하면 왜 못합니까?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시험을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 한편주고 적합한 시 제목을 맞춰봐라, 자꾸 이런 걸 하니까 고등학교는 그런 것만 연습을 시키죠. 고등학교 국어교육 열심히 받았어도 외국 아이들처럼 5분 스피치 하라고 하면 못하고 자기주장을 해 보라고 하면 못하고 다행히 대학이 논술을 하시겠다고 해서 대 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장관 되었을 때 정부 일각에서는 고등학교가 왜 논술하느냐. 그런데 제가 아니다, 이것이 본고사 논술이 아니라면 고등학교는 마땅히 이런 걸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대학 총장님들

과 처장님들께 호소했습니다. '고등학교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논술, 그걸 하세요. 그걸 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논술을 가르치면 국어 교육의 한 부문은 제대로 정상화 됩니다. 제가 논술만큼은 지금도 열심히 하자고 하고 대학과 고등학교가 협력을 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에 협력하는 길도 열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교육비는 어떤 방법으로도 줄일 수 없습니다. 왜 미국아이들과 영국아이들이 사교육시장에 안 갑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대학에 가는 시스템 이니까 고등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신일 부총리) 사실 저는 별로 권고하고 싶지 않는데 그 책은 여러 가지 신문이나 잡지에 짧게 썼던 것을 모은 것입니다. 그땐 그 사안에 비추어서 거두절미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내놓았더니 “너 그때 한말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느냐?” 자꾸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곤욕스럽습니다. 짧은 글은 짧은 글 용도일 뿐입니다. 제가 교과서로 쓰던 ‘교육사회학’이라는 비교적 인기가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제 철학이 담겨 있다기 보다는 제 사고의 기본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

정리 및 교열

표한형 연구위원 (raisosa@hri.co.kr) ☎ 02-3669-4131

---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1	2002	2003	2004	2005(P)	2006(E)	2007(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3.8	7.0	3.1	4.7	4.2	5.0	4.2
	최종소비지출 (%)	4.9	7.6	-0.3	0.4	3.9	4.5	3.7
	민간소비 (%)	4.9	7.9	-1.2	-0.3	3.6	4.2	3.5
	총고정자본형성 (%)	-0.2	6.6	4.0	2.1	2.4	3.2	2.5
	건설투자 (%)	6.0	5.3	7.9	1.1	-0.2	-0.4	1.5
	설비투자 (%)	-9.0	7.5	-1.2	3.8	5.7	7.6	4.5
대 외 거 래 통 관 기 준	경상수지 (억 \$)	80	54	119	282	166	61	-30
	무역수지 (억 \$)	93	103	150	294	232	161	100
	수출 (억 \$)	1,504	1,625	1,938	2,538	2,844	3,250	3,560
	증가율 (%)	(-12.7)	(8.0)	(19.3)	(31.0)	(12.0)	(14.4)	(9.5)
	수입 (억 \$)	1,411	1,521	1,788	2,245	2,612	3,094	3,460
	증가율 (%)	(-12.1)	(7.8)	(17.6)	(25.5)	(16.4)	(18.4)	(11.8)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4.1	2.7	3.6	3.6	2.8	2.2	2.8
	실업률 (%)	3.8	3.1	3.4	3.7	3.7	3.5	3.7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91	1,253	1,192	1,145	1,024	955	925
	국고채금리 (평균, %)	5.7	5.8	4.6	4.1	4.3	4.8	4.4